

한나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발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권경석 의원(창원갑)이 3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불을 지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에 포함되고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에서 해당 상임위의 여당 간사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것이어서 정치권의 주목을 끌었다.

하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이날 오전 권 의원 발의 법안은 당론이 아니라고 밝혔고 정치권에서도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상황에서 당장 논의를 시작하기에 이르러서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어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의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의 개편안은 현재의 광역 시·도체제는 유지하되 그 아래에 전국 230개 시·군·구를 자율적으로 합쳐서 50~60개의 통합 시·군·구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

박희태 대표 "당론 아니다" 한발 빼 당장 논의는 힘들 듯

도지사는 임명직...전남도 4~5개 통합시로 통폐합 가능성

초 정치권에서 합의했던 특별시와 광역시, 도(道) 폐지 방침은 빠졌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자치구'로 합친다.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다.

6개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군들은 모두 폐지되고 행정구·군으로 남는다. 즉, 광역시장만 선출하고 광역시 내 구청장 선거는 없어지게 된다.

또 도에 속한 시·군·구는 통합 시로 개편되는 한편 도는 기존 이중적 지위에서 국가 위임 사무만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기능 전

환하고 자치사무는 통합시로 이관하도록 했다. 물론 통합시장은 선출직, 도지사는 임명직이 된다. 이 경우 전남도의 시·군·구는 4~5개의 통합시로 통폐합할 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현행 도에 속한 2개 이상의 시·군이 통합해 인구 100만명 이상이 되는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이를 새로운 광역시로 인정, 자치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여수·순천·광양 등 전남 동부권에서 또 다른 광역시가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군·구 통합은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각 시·군·구별로 위원장 포함,

15~20명으로 구성되는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합추진위원회는 기초단체장이 직권으로, 또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30분의 1 이상이나 지방의회의 청구로 설치된다. 시·군·구 간 통합은 주민투표로 결정되며, 통합에 따른 불이익 배제, 주민투표비용 국가 부담 등도 규정했다.

이처럼 여권 내에서 행정구역 개편안이 나왔지만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금융 위기로 정치권의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갖고 에너지를 쓸 때냐는 분위기가 당에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다"면서 "2010년 지방선거 이전 처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번 국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제위기·직불금' 책임 공방

18대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

국회는 3일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여 경제위기와 쌀 직불금 부당수령 사태, 표적사정에 의한 '야당 탄압'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특히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추가폭락과 환율급등 등 금융위기의 책임소재와 놓고 정부와 야당 간에 거친 설전이 오갔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날 한승수 국무총리를 향해 "이 정부의 경제성적표가 몇 점이나 되느냐"고 물은 뒤 "국제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 성적이 좋지 않다"는 대답이 돌아오자 "아예 성적을 못 매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97년 37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고를 언급하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넘겨준 외환보유고가 2천623

억 달러였고, 원-달러 환율이 949원이었다. 이라고도 물어버린 10년이나"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외환위기 때는 아시아 문재였지만 지금은 대외여건이 나쁘기 때문에 10년 전 상황과 비교는 어렵다"며 "사실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성장 잠재력이 거의 반 토막 났다"고 맞섰다.

그러자 박 의원은 "이 정부 들어 특권층에 이익을 준 것 외에 무엇이 있느냐. 한나라당에는 IMF 2관왕이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감사원이 지난해 청와대의 요청을 받아 감사시기를 조정하고 감사 결과를 청와대에 사전 보고·비공개한 것은 대선을 5개월 앞둔 시점에 쌀 소득 직불제의 실정이 밝혀지면 치명적 타격이 될 수밖에 없었다"며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때 넘겨준 외환보유고가 2천623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자치구 폐지 찬성...道 존치 반대"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이 3일 발의한 행정구역 개편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행정구역 개편 정책 방향을 주도해 왔던 국회 행안위 민주당 간사 우윤근 의원이 광역시 내 자치구의 폐지에는 찬성하지만 도의 존치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우 의원은 이날 권 의원의 법안 발의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현재 25개의 자치구를 인구 규모 및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 4~5개의 '통합구'로 합치고 서울시장과 통합구청장은 선거로 뽑는 방안과 광역시는 유지하되 광역시 내의 자치구들은 모두 폐지해 구청장 선거는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 반응을 표시했다.

하지만, 우 의원은 도를 존치시켜 국가 위임 사무만을

맡게 하는 안에 대해 반대를 명확히 했다.

우 의원은 "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초와 광역이 거의 모든 사무를 중첩적으로 처리하는데 따르는 업무 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에 대해 행정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도를 존속시키는 것은 결국 현 시스템의 연장으로 지역주의 고착, 효율성 저하 등 악순환이 재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국토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고 결국 수도권 편중, 영남권 편중, 호남권 소외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방행정체제마저 이런 방식으로 개편하면 사회적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 '개편안' 입장 밝혀

"도 존속은 지역주의 고착 등 악순환 재연"

우 의원은 이어 "도를 폐지하고 통합된 광역시·군이 종전의 시·도와 시·군·구가 나눠서 행사해온 자치사무와 관련된 권한과 재정에 대하여 일원적으로 통합 행사해야 한다"며 "이 경우 자치권의 내용과 행사가 훨씬 충실해질 것이고 시·군·구 통합을 통한 체제개편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분권화를 본격적으로 가속화시킬 수 있는 명분과 계기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관련, 우 의원은 "현재 민주당은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올말까지 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해관계 주체로부터 광범위한 여론 수렴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 계파 갈등 재연되나

이재오 前 의원 '복귀설' 놓고 '親李' '親朴' 격돌

한나라당이 계파간 신경전으로 다시 갈등이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 체류중인 이재오 전 의원의 조기 귀국설이 촉발이 됐다.

이 전 의원 조기 귀국설은 여론, 특히 친이(친 이명박) 세력내 구심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범여권의 좌장으로 김대중 정부 당시 '권노갑'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당내 친이 직계들의 움직임도 최근 활발해졌다.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로 분류되는 '안국 포럼' 출신 의원 12명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만찬을 갖고 정치 현안을 두루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이재오 전 의원의 귀국 문제

도 일부 의원들이 제기했다고 한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별다른 언급없이 "잘 있다고 하거나"는 안부 정도만 물어봤다고 한 참석 의원은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 만찬에 참석했던 다른 의원은 3일 "별다른 얘기는 없었지만 이 대통령도 여러 구심점의 필요성은 느끼는 것 같다"면서 "다만 이재오 전 의원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정리가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산석 전 국회의장도 이 전 의원의 귀국에 크게 반대하지 않는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의 연말·연초 재관련도 친이 세력의 결집과 맞물려 있다. 이미 이재오, 이방호, 정종복 전 의원 등 친이 세력의 전진 배치 얘기가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는 쇄고기 파동에 이어 경제위기 속에서 더 이상 밀려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이 묻어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2010년 지

방선거까지 속수무책으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바탕이 돼 있다는 것이다.

친이 세력의 움직임에 친박측은 태연한 모습이지만 내심 불쾌한 기색이 역력하다.

친박측 한 의원은 "자기를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냐"면서 "지금 상황에서 다 같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생각해야지, 정신들이 있는 사람들이나"고 반박했다.

결국 친이의 결집은 당내 친박의 반작용만 불러오며 새로운 계파 갈등의 고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근제 전 대표가 이날 정부가 발표할 수 도권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 "규제완화부터 하는 것은 선후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내놓은 것도 심상치 않다. /연합뉴스

나주시의회 주민 무시하나?

의회 정상화 5개월 합의해 놓고 3개월째 묵묵부담

한달 이상 파행 끝에 원(院)구성을 한 나주시의회가 시민사회단체와 이행기로 한 합의를 3개월이 되도록 지키지 않고 있다.

3일 나주시의회와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월5일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의회 민주적 운영 및 제도개선 촉구 시민대책위원회'와 의정비 반납 등 5개항의 이행합의서에 서명했다.

구체적 합의내용은 의회 파행에 대한 대시민 공개사과, 즉각적 원 구성, 민주당과 무소속 측 상호 사과,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7월분 의정비 9월 14일까지 반납, 민주적 의회 운영 제도개선 등이다.

하지만 나주시의회는 합의를 한 지 3

개월이 되도록 의정비 반납과 민주적 의회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시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공약이행평가 조례 제정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풀뿌리 시민모임은 최근 성명을 내고 "시의회가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채 시민과의 합의를 휴짓조각처럼 내던졌다"며 "성의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경우 주민소환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14명 의원 가운데 민주당(비례2명 포함) 9명을 제외한 무소속 5명은 의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7월분 의정비를 지난 8월 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등 반납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A large advertisement for 'Chungcheong' (충청)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hotel deals, and services. It includes a phone number 062-515-7600 and lists several travel options with prices.